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 ‘기본소득’ 관련 정책 III

**헤드라인뉴스** 기본소득 실험의 명암

**사회·복지** 국제 비영리기구 ‘Give Directly’, 빈곤층에  
기본소득 지급

### 사회·복지

‘무조건적 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비영리단체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3년간 현장 실험  
시행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자원조달 모델 제시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 〈북·중·남미〉

|          |     |
|----------|-----|
| 뉴욕       | 윤규근 |
| 로스앤젤레스   | 최윤경 |
| 샌디에이고    | 김민희 |
| 샌프란시스코   | 박신아 |
| 시카고      | 강기향 |
| 올랜도      | 박혜진 |
| 워싱턴 D.C. | 이정근 |
| 하와이      | 임지연 |
| 휴스턴      | 이경선 |
| 에드먼턴     | 장지훈 |
| 토론토      | 고한나 |

### 〈아시아·아프리카〉

|        |     |
|--------|-----|
| 쿠알라룸푸르 | 홍성아 |
| 싱가포르   | 이은주 |
| 뉴델리    | 박원빈 |
|        | 박효택 |
| 자카르타   | 박재현 |
| 도쿄     | 이선인 |
| 광저우    | 손지현 |
| 베이징    | 정민욱 |
| 상하이    | 문혜정 |
| 충칭     | 모종혁 |
| 칭다오    | 강경이 |
| 나이로비   | 한 울 |

### 〈유럽〉

|        |     |
|--------|-----|
| 암스테르담  | 장한빛 |
| 베를린    | 신희완 |
|        | 유진경 |
|        | 홍남명 |
| 프랑크푸르트 | 이은희 |
| 하노버    | 이희재 |
| 스톡홀름   | 허윤희 |
| 바르셀로나  | 박정수 |
|        | 진광선 |
| 런던     | 이용훈 |
| 로마     | 서동화 |
| 피렌체    | 김예름 |
| 보르도    | 김준광 |
| 파리     | 김나래 |

## 기본소득 실험의 명암

캐나다 / 사회·복지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시범 프로젝트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캐나다 긴급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 냈으나, 막대한 비용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 의존성 등이 단점으로 부각됨

### 캐나다의 최근 기본소득 프로젝트

-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시범사업 시행과 중단
  - 이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약 4,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할 예정으로 시작
    - 대상자는 1인당 연간 총 17,000달러(약 1,500만 원)에서 개인 근로소득의 절반을 뺀 금액을 수령(예: 연 2,4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약 1,500만 원에서 개인 소득의 절반인 1,200만 원을 공제한 약 300만 원을 수령)
    - 부부는 24,000달러 수령 가능
    - 장애인은 최대 23,000달러 수령 가능
  -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발견된 장점
    -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수혜자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기존 복지제도는 다양한 제한 사항 등을 통해 사용처를 세세하게 관리해 접근성이 떨어짐
    -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근로/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비공식 연구결과가 발표
  - 그러나 시행된 지 15개월 만에 선거결과에 따른 州정부의 교체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중단 발표
- 연방정부의 ‘캐나다 긴급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15일부로 28주간 한시적으로 시행
  - 2020년 7월에 발표된 CERB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최대 118억 달러를 만 15~24세의 연령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제안

-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다수의 수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에 의존하거나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 생활수준을 개선하려는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기본소득 금액을 더 높게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 존재
  - 기본소득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CERB의 경우 긴급성과 적시성(適時性)으로 인해 지원제도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일부 계층의 수입이 평년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 약 백만 명의 청년층(만 15세~24세)이 2019년 월 소득보다 CERB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
  -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 예산 731억 달러 중 일부가 낭비
    - 가구 수입이 10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 70억 달러 정도가 취지와 다르게 집행
  - 최근 월 2,000달러를 지원한 CERB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비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많은 지출액이 예상
    -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캐나다인이 조건 없이 연간 24,000달러를 지급 받는다면 연간 소요되는 재정 지출은 4,650억 달러에 이름
    - 이는 회계연도 2019/2020년의 연방정부 전체 지출액보다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
  - 연방정부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편성보다는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다면 계층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을 파악할 수 없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숙자 등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함
    - 단,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근로자가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단축할 가능성 있음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장애인 지원제도, 근로공제, 고용보험, 아동수당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

<https://www.heritage.org/international-economies/commentary/canadian-experiment-quickly-shows-failures-universal-basic>

<https://torontosun.com/opinion/columnists/opinion-cerb-problems-underscore-problems-with-universal-basic-income>

---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 국제 비영리기구 ‘Give Directly’, 빈곤층에 기본소득 지급

케냐 / 사회·복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수혜자가 스스로 지출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케냐에서는 국제 비영리기구 ‘Give Directly’가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그룹별로 달리하고 비교 연구를 진행.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해 기본소득 수혜자의 변화 사례를 분석·관리

## 배경 및 목적

- ‘Give Directly’는 2009년부터 4억 달러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개발도상국의 100만 가구에 지급
  - ‘Give Directly’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INGO)
  - 빈곤층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
- ‘Give Directly’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수혜자가 지원금을 낭비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개도국 주민들은 자산/소득을 낭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산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보여줌
  - 수혜자는 의약품은 물론 가축(소, 돼지, 염소 등)을 사서 소득 창출에 나서거나 아동을 위한 학습환경을 조성
- ‘Give Directly’는 케냐에서는 2016년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진행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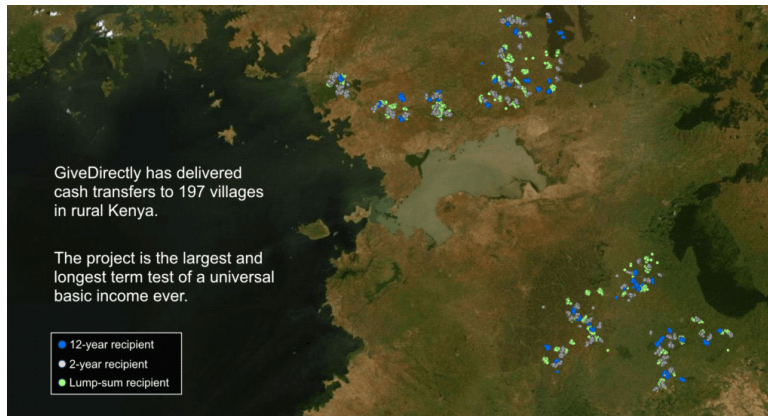
- ‘Give Directly’는 2016년부터 케냐 주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3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 197개 마을에 사는 주민 20,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그룹별로 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금액 등을 다르게 배분해 생활수준 개선 여부 등을 조사/관리
  - 44개 마을 주민(4,966명)은 성인 1인당 하루 약 0.75달러를 12년 동안 수령
  - 80개 마을 주민(7,333명)은 성인 1인당 하루 약 0.75달러를 2년 동안 수령

- 71개 마을 주민(8,548명)은 2년 동안의 기본소득을 한 번에 수령
- 100개 마을 주민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음
- 기본소득 수령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룹별 비교 분석
  - 경제복지(소비, 자산), 건강(영양, 인지), 사회복지(정신건강, 사회통합, 가족관계), 거시경제적 활동 등(마을 기반시설, 정치 참여 및 범죄율), 경제활동(사업 및 이주 여부)의 변화 추이 조사
  - 그룹별 비교 조사 수행
    - 12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는 그룹과 2년 동안만 받는 그룹을 비교해 기본소득 수령 여부에 따라 수혜자가 투자, 창업, 이주 등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관찰
    - 2년 동안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사람과 한 번에 받는 사람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관찰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는 가구 구성원 중 의사결정권이 있는 한 명을 선정해 시행. 이 조사의 중간보고 자료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유선전화로 실시한 가구 조사 자료에 기반해 작성
  - 코로나19 발생 후 기본소득이 기아, 질병 완화에 기여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질병 발생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기아, 질병 해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음
  - 코로나19 발생 후 케냐의 수혜자들은 농업 외 다른 사업을 시도해 소득은 줄었지만 기아 증가세는 완화
    -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아 증가세를 완화하고, 기본소득이 수혜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과 일치
  - 식료품 및 건강을 위한 생필품 확보에 기본소득의 기여도가 높음
    -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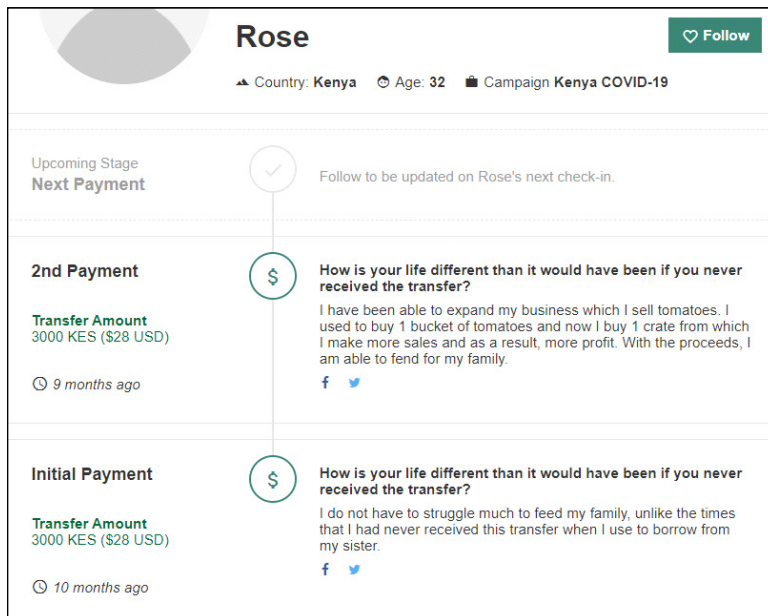
## 프로그램 평가

- 기본소득의 단순 일괄 지원이 아닌 그룹별 차등 지급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때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 기본소득 지급 후 대상자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활용해 생활을 개선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지급 방식과 금액 등에 차등을 두고 배분하는 방식은 향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때 소득분위 외에도 여러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 국가/지역/기본소득 규모/지급방식에 따라 여러 결과가 산출. 따라서 케냐 내 여러 사례 조사 후 다른 국가의 사업 수행 사례와 비교 분석할 필요 있음
- 수혜자가 직접 기본소득 사용 방식, 사용 시기,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기본소득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수혜자가 자신의 SNS 등 인적 정보를 공개하고 기본소득 금액, 받은 날짜, 사용처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기본소득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수혜자의 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Give Directly'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사업



[그림] 'Give Directly'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케냐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날짜, 사용처 등 작성 예시

<https://www.givedirectly.org/ubi-study/>  
<https://live.givedirectly.org/>  
<https://www.givedirectly.org/cash-research-explorer/>  
<https://www.givedirectly.org/financials/>  
<https://www.givedirectly.org/basic-income-covid-19/>

# ‘무조건적 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독일 / 사회·복지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약 50%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이 부족하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

##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시행

- Statista Research Department사(社)의 설문조사(2018년 조사 시행, 2020년 4월 발표, 14세 이상 2,031명 참여, 온라인 설문조사)
  -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독일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적극 찬성 16%, 찬성 35%, 반대 29%, 적극 반대 16%, 응답 없음 4%
- mdr Fragt의 설문조사(2020년 7월 17일~20일 조사, 2020년 8월 발표, 15,633명 참여, 성별/학력/직업 등 통계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합리적임 55%, 비합리적임 43%, 응답 없음 2%
  - “기본소득이 있어도 계속 일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변치 않고 계속 일한다 46%, 업무를 약간 바꿔 일한다 32%, 일을 그만둔다 8%
  -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에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덜 일할 것이다 76%,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2%, 직업 교육을 받을 것이다 19%
  - “무조건적 기본소득 금액은 얼마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889유로: 너무 적음, 1,219유로: 이상적, 1,613유로: 너무 높음
  - ““부유한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찬성 81%, 반대 15%, 응답 없음 4%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더 행복할 것이다 56%, 더 많이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51%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주제별 응답
  -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60%, 그렇지 않다 33%, 응답 없음 7%
  -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55%, 그렇지 않다 42%, 응답 없음 3%
  - “근로욕 또는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근본적으로 저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54%, 그렇지 않다 43%, 응답 없음 3%
  - “부자와 빈자 간의 불평등이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39%, 그렇지 않다 57%, 응답 없음 4%
-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57%, 준비가 되어 있음 23%, 응답 없음 20%

### 비영리단체의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 베를린의 비영리협회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진행
  - 약 181,000명에게서 받은 기부금으로 프로그램 시행. 전체 예산은 약 520만 유로 수준
  -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3년 동안 매달 1,200유로를 지급, 참가자들에게 총 43,200유로 지원
-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
  - 연구 주체는 독일 경제연구소(Deutschen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연구 총 책임자는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 그 외에도 막스플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가 공공재 연구를, 쾰른 대학교(die Universität zu Köln)와 쾰른 공과대학교(Technische Hochschule Köln)가 심리학, 인지경제학 분야 연구를 지원
- 연구 총 책임자인 위르겐 슈프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물질적으로 안정적일 때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본소득이 번아웃(burnout)을 줄이고 더 나은 업무나 직업훈련을 가능하게 하는지,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공공의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등을 연구
    - 그는 기본소득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여부를 참여자의 머리카락 샘플 채취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함

-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처럼 사람들이 회사를 창립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 위르겐 슈프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함
  - 하지만 기본소득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효과 등을 연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 이번 프로그램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22명을 선발
  - 대상자 선발 기준은 21~40세의 1인 가구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통계집단
- 2021년 6월 1일부터 실험을 시작
  - 기본소득 수령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자신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근로(고용상태) 역시 자유롭게 선택
  - 다만 연구를 위해 3년 동안 총 7회 온라인 설문조사지에 답해야 함
  - 그 외에도 1,380명이 기본소득 없이 수당을 받고 설문조사지를 작성

### 시민단체의 ‘베를린에서의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제안을 시의회에서 거부

- 시민 이니셔티브 ‘Vertrauensgesellschaft e.V.’에서는 “기본소득 탐험: 베를린 내에서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라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
  - 이 프로젝트에 시민 30,000명 이상이 지지
  - 이 이니셔티브는 3,500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1년간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희망
  - 시범 프로젝트 예산규모를 7,000만 유로로 하고, 개인당 매달 1,120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프로젝트 제안을 2021년 8월 베를린 시의회에서 거부
  - 모든 정당에서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각 정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사민당(SPD)은 예산규모는 적정하나, 현재 베를린에서 실직자를 위해 ‘연대기본소득’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 녹색당(Grün) 역시 예산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범 프로젝트 시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
    - 좌파당(Linke)도 흥미롭고 합리적인 실험이나 현시점에서의 시행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
    - 기민당(CDU)은, ‘우리 정당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힘
    - 자민당(FDP)은 이 프로젝트가 개인의 능력을 간과한다고 지적



- 향후 이 시범 프로젝트를 다시 제안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170,000명의 지지자가 필요하고, 지지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시민 투표를 진행해야 함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독일 설문조사 결과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94047/umfrage/meinung-zu-einem-bedingungslosen-grundeinkommen-in-deutschland/>

<https://www.mdr.de/nachrichten/mitmachen/mdrfragt/umfrage-ergebnis-mehrheit-fuer-bedingungsloses-grundeinkommen-100.html>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독일 전역 대상)

[https://www.diw.de/de/diw\\_01.c.818916.de/1.200\\_euro\\_monatlich\\_drei\\_jahre\\_lang\\_\\_pilotprojekt\\_zum\\_bedingungslosen\\_grundeinkommen\\_beginnt\\_mit\\_der\\_auszahlung.html](https://www.diw.de/de/diw_01.c.818916.de/1.200_euro_monatlich_drei_jahre_lang__pilotprojekt_zum_bedingungslosen_grundeinkommen_beginnt_mit_der_auszahlung.html)

<https://www.dw.com/de/pilotprojekt-grundeinkommen-startet-1200-euro-jeden-monat-einfach-so/a-54690017>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verbraucher/grundeinkommen-103.html>

베를린 내 시범 프로젝트 제안을 시의회에서 거부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ein-geld-fuer-nichts-in-berlin-parlament-lehnt-projekt-fuer-grundeinkommen-ab/27533238.html>

홍 남 명 통신원, n.hong@campus.tu-berlin.de

# 비영리단체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3년간 현장 실험 시행

독일 / 사회·복지

독일에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연구 분석하기 위한 현장 실험이 진행 중. 비영리단체가 시행하는 이 실험의 목적은 각각의 가설을 전제로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증적인 학술연구 결과를 제시해 미래 전망에 맞는 기본소득 설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

## 배경 및 목적

-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협회의 실험
  -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 협회가 2014년부터 후원금을 모아 1,000유로씩 1년간 지급
    - 1명에게 지급할 자금이 확보되면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생존을 위한 노동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한다는 심리적 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 체계적인 현장 실험을 통한 실증적 학술연구의 필요성 대두
  - 독일경제연구소, 쾰른 대학교,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나의 기본소득’ 협회와 협력
  -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더 이상 신념, 신앙 수준의 가설에서 진행하지 않고 실증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기 위함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범 프로젝트 ‘그것이 알고 싶다’ 시행

## 시범 프로젝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요 내용

- 연구 목표와 실험 내용
  - 연구 목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영향,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효용성, 현실적인 설계에 필요한 요인 모색 등임
  -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진행
  - 실험 대상자 선정
    - 2020년 8월에 공모해 약 201만 명의 지원자 중 1차로 1,500명을 선정한 뒤 추첨으로 122명을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독일 내 21~40세의 1인 가구로서 중간소득자(소득 기준 50%)
- 2021년 6월 1일부터 대상자에게 매달 1,200유로씩 3년간 지급
- 세 가지 실험모델 시행
  - 2021년 6월부터 실험 대상자 모두에게 1,200유로를 지급
  - 2022년에는 수입이 1,200유로 이하인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 지급
    - 1,200유로 지급 시의 효과와 비교 분석
  - 2023년부터는 실험 대상자 모두에게 1,200유로를 지급하고, 1,200유로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50% 내도록 함
    - 실제 상황에서의 재원조달방식 설계 구상
- 현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사회학·심리학적 연구가 검증·확인해야 할 미래상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 지루한 노동은 기계에 맡기고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을까?
    - 이윤을 남기지 않는 일의 가치도 존중할 수 있을까?
  - 빈부격차 문제
    - 생존의 두려움이 사라져 서로 미워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
  -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문제
    - 생존에 대한 위기감으로 쫓기지 않고 사회분위기가 좋아지면 환경친화적으로 살 수 있을까?
    - 여유로워져서 열린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환경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게 되어 경제성장이 조금 덜 중요해질까?
  -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문제
    -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은 ‘체제’가 ‘사람’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체제가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도 체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 사회가 안정되면 더 나은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포퓰리스트(populist)의 이른바 ‘단순해법’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 평생 생계가 보장되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까?
    - ‘개인의 동굴’로 숨어들지 않고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 될까?
  - 전사회적 번아웃(burnout) 문제(현재 독일 시민 2명 중 1명꼴로 번아웃 위기)
    -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도 좋아질까?
    - 고독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좀 더 단결(연대)할 수 있을까?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journal/vom-probieren-zum-studieren>  
[https://images.meinbge.de/image/upload/v1/pilot/projektmappe/Pilotprojekt\\_Grundeinkommen\\_Magazin.pdf](https://images.meinbge.de/image/upload/v1/pilot/projektmappe/Pilotprojekt_Grundeinkommen_Magazin.pdf)  
[https://www.diw.de/de/diw\\_01.c.818916.de/1.200\\_euro\\_monatlich\\_drei\\_jahre\\_lang\\_\\_pilotprojekt\\_zum\\_bedingungslosen\\_grundeinkommen\\_beginnt\\_mit\\_der\\_auszahlung.html](https://www.diw.de/de/diw_01.c.818916.de/1.200_euro_monatlich_drei_jahre_lang__pilotprojekt_zum_bedingungslosen_grundeinkommen_beginnt_mit_der_auszahlung.html)  
<https://www.mein-grundeinkommen.de/magazin/das-gespaltene-land>

---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재원조달 모델 제시

독일 / 사회·복지

독일 연방정부의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는 대규모의 증세 없이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 하지만 대규모의 증세 없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무조건적 기본소득’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어 진행 중

###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의 최대 쟁점은 ‘재원조달’

- ‘무조건적 기본소득’ 논의에서의 다양한 쟁점
  -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집단이 지급 받지 않은 비교 집단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적극적임. 기본소득으로 긍정적인 심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2017/2018년 핀란드에서의 실험 결과)
  - 심리에 미치는 영향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없음(‘나의 기본소득’ 협회의 실험 보고)
    - 개인의 자산/소득 수준에 대해 까다롭게 검토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 없음
    - 생존을 위한 노동의 강제성 해소
  - ‘사회국가’<sup>1)</sup>에 미치는 영향
    - (1)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지고 ‘사회국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무조건적 기본소득 반대 입장)
    - (2)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함(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 입장)
  - 재원조달
    - (1) 대규모 증세 불가피(무조건적 기본소득 반대 입장)
    - (2) 대규모 증세 불필요(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 입장)
    -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를 통해 논의를 심화

1) ‘사회국가(Sozialstaat)’는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시민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를 뜻함.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 제20조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 연방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 전통은 1883년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공보험 도입에서 시작됨. 직업훈련 교육생 지원, 등록금 없는 대학교, 대학생 생활비 장기 대출, 세입자 권리 보장, 노동자 경영참여권 등 일련의 정책과 관련 법률이 바로 이 사회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음. 정치인들이 사회정책을 토론할 때도 자주 쓰는 개념임

## 재원조달 모델 제시

- 슈테판 베르크만(Stefan Bergmann)<sup>2)</sup> 모델(비용 산출: 2014년 기준)
  - ‘무조건적 기본소득’ 연간 총 필요금액 추산: 연금생활자는 기존 연금제 구조 유지를 전제

|                            | 월 지급액<br>(단위: 유로) | 연간 지급액<br>(단위: 유로) | 독일 전체 연간 비용<br>(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br>(단위: 십억 원)<br>(1유로=1,350원 기준) |
|----------------------------|-------------------|--------------------|----------------------------|----------------------------------------|
| 18세~64세의 성인 472만 명         | 750               | 9,000              | 424.8                      | 573,480                                |
| 18세 이하 131만 명              | 400               | 4,800              | 62.9                       | 84,915                                 |
|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6,030만 명 | 200               | 2,400              | 144.7                      | 195,345                                |
| 연간 총 필요금액                  |                   |                    | 632.4                      | 853,740                                |

- 기존 사회보장비용 지출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620억 유로로 예상

| 지출예상액 총액                  | (단위: 십억 유로)          | (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br>(단위: 십억 원)<br>(1유로=1,350원 기준) |
|---------------------------|----------------------|-------------|----------------------------------------|
|                           |                      | 632.4       | 853,740                                |
| 2차 실업자연금 <sup>3)</sup> 비용 | 30                   |             |                                        |
| 건강·요양보험 전액 국가 부담          | 14                   |             |                                        |
| 기존 사회보장비용 절감 금액           | 대학생 생활비 장기대여금 BAfoeG | 3           | 62                                     |
|                           | 영유아 부모 보조금           | 5           |                                        |
|                           | 특별보조금 Beihilfe       | 10          |                                        |
| 세수(稅收)에서 보충할 금액           |                      | 570.4       | 770,040                                |

- 기본소득 지급 이후 모든 추가 소득에 60% 일괄세율(Flat Tax)을 부과할 경우 세수(稅收)는 기본소득 지급 전과 비교해 5,480억 유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른 현행 세제에서는 2019년 기준 수입에서 세제 혜택 금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이 총 1조 유로, 연간 소득세 납부 총액은 2,020억 유로로 평균 세율이 약 20%

2) 법학 박사,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10단계>의 저자

3) 독일 실업자연금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ALG I)에서는 이전 직장 월급의 일정 비율을 받지만, 2차(ALG II)에서는 하르츠 IV법 도입 이후 이전 직장의 월급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조금 446유로(2021년 기준)를 받음. 실업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휴일을 제외한 날에는 노동중개공사의 연락을 언제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제안된 일자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추가 수입은 노동중개공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br>금액<br>(단위: 십억 유로) | 세율 평균 혹은<br>일괄세율 | 종합소득세 납부 총액<br>(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br>(단위: 십억 원)<br>(1유로=1,350원 기준) |
|--------|----------------------------------|------------------|----------------------------|----------------------------------------|
| 기본소득 전 | 1,000                            | 20%              | 202                        | 272,700                                |
| 기본소득 후 | 1,250                            | 60%              | 750                        | 1,012,500                              |
| 증감액    | (증가) 250                         |                  | (증가) 548                   | (증가) 739,800                           |

- 2009년부터 이자·주식·투자·환차익 등의 이익에 25%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자본  
증식세(Abgeltungssteuer)를 폐지하고 일괄세율을 적용하면 세수(稅收)는 250억  
유로 증가
  - 이 금액을 일괄세율 60% 적용을 통한 세수 증가액(5,480억 유로)과 합하면 총  
5,730억 유로가 됨
  - 여기에서 앞의 '세수에서 보충할 금액' 5,704억 유로를 합산

|                                               | 세수 증가액<br>(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br>(단위: 십억 원)<br>(1유로=1,350원 기준) |
|-----------------------------------------------|-----------------------|----------------------------------------|
| 기본소득 이상 수입에 일괄세율 60% 적용을<br>통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증가액 | 548                   | 739,800                                |
| 자본증식세 폐지를 통한 세수 증가액                           | 25                    | 33,750                                 |
| 총 세수 증가액                                      | 573                   | 773,550                                |

- 그 외 세수 증대 방안
  - 부가가치세의 소폭 인상, 주류세/탄소세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세금 혹은 '죄악  
세'<sup>4)</sup> 요율 인상
  - 1997년에 시행이 무기한으로 중단된 부유세('자산세') 재도입(사민당의 제안:  
순자산 200만 유로 이상은 세율 1%, 10억 유로 이상은 세율 2% 적용)
  - 상속세 개혁, 자금이동세<sup>5)</sup> 신설
- 경제학자 토마스 슈트라우하르(Thomas Straubhaar) 모델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매월 1,000유로를 지급할 경우 2015년 기준 연간 사회보장  
제도 관련 국가 총 지출액 8,900억 유로를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 총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2015년 기준 독일 인구는 약 8,168만 명)

4) 죄악세(Sin tax) 또는 악행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한국어 위키, 죄악세). 주류세·담배소비세·사행성 산업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함.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GMXX2JV>

5) 2011년 기준 40개국에서 시행, 독일은 오랜 토론 끝에 2021년부터 도입할 것 같았으나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음. 10억 유로  
이상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자금 이동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프랑스는 2012년부터 0.2%  
세율을 적용했으며, 2013년부터는 0.3%로 인상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모두를 위한 마이너스 소득세’로 간주하고, 추가 수입 1유로 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이를 통해 기본소득제가 사회보장제도를 없애고 ‘사회국가’의 근간을 해친다는 반대 논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2021년 9월 15일에 ‘주간경제(Wirtschaftswoche)’에 발표한 모델
    - 독일 주민 모두에게 월 1,000유로씩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총 금액은 약 1조 유로(약 1,350조 원)
    - 9,960억 유로의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 현행 조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 14~45% 적용. 다른 세금 인상은 없음
  - 연방정부의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가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막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
- 그 외 모델
- 녹색 기본소득네트워크(2019년)
    -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문화적/사회적/정치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제안
    - 구체적인 액수 제시는 없음
  - 신자유주의 대응단체 아타크(Attac)의 ‘모두를 위해 충분해’ 소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 건강·요양보험 등을 직접 관리하는 ‘시민안전’ 자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
    - ‘무조건적 기본소득’ 금액은 압류 금지 금액(채무자에게 저당이나 압류를 할 수 없는 최대 금액, 2021년 7월 1일 현재 1,252.64유로)과 동일하게 함
    - 건강·요양보험료의 1/2은 기존 사회보장체제에서처럼 고용주가 부담
    - ‘무조건적 기본소득제’ 도입 전에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할 것을 요청
  - 기업가(dm 체인 설립자)이자 기본소득 주창자인 피츠 W. 베르너의 제안
    - 부가가치세 50% 인상을 통해 매월 1,000유로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

##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평가

-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재원조달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치
- 기존의 조세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생성된다고 봄



- 재원조달 가능성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모델 및 이들 모델이 미치는 영향과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여러 모델을 단순 비교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 있음
- 또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평가는 각각의 주관적/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 등과 결부되어 있음
-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현장 실험을 통해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 경험 등이 쌓여야 할 것으로 판단

<https://www.youtube.com/watch?v=ibw8PIRVdpl>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was-ist-elterngeld-12462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Ministerium/Wissenschaftlicher-Beirat/Gutachten/bedingungsloses-grundeinkommen.html>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14/das-bedingungslose-grundeinkommen>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studie1>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zierungskonzepte-und-modellversuche?blickinsbuch>

<https://www.wiwo.de/politik/deutschland/streit-um-finanzierung-warum-das-grundeinkommen-sehr-wohl-finanzierbar-ist/27597206.html>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zierungskonzepte-und-modellversuche>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pocket-politik/16561/sozialstaatsbpb.de/nachschlagen/lexika/pocket-politik/16561/sozialstaat>

[de.wikipedia.org/wiki/Sozialstaat](https://de.wikipedia.org/wiki/Sozialstaat)

<https://ko.wikipedia.org/wiki/사회국가>

[https://www.grundeinkommen-attac.de/fileadmin/user\\_upload/AGs/AG\\_Genug\\_fuer\\_Alle/Grundeinkommen/Position\\_gfa\\_GE2019druck.pdf](https://www.grundeinkommen-attac.de/fileadmin/user_upload/AGs/AG_Genug_fuer_Alle/Grundeinkommen/Position_gfa_GE2019druck.pdf)

## 세계도시동향 제515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2월 6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